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VOL.17

2023.5.1.~2023.5.31.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□ 중견기업 경제현안 간담회 (5.9)

- 자동차, 기계 등 업종별 주요 중견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'중견기업 경제현안 간담회' 개최
- 참석자들은 자금 경색, 규제 강화, 전기료 인상, 인력난 등 국내에서 겪는 고충과 원자재가 상승, 글로벌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고, 금융·세제·수출 지원 등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정책 지원 필요성 강조

□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 (5.22)

- 3월 취임한 김기현 당 대표와 중견기업계가 만난 첫 번째 공식 행사로, 중견련은 R&D·투자 활성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네 개 주요 부문별 '중견기업 핵심 정책과제' 전달
- R&D·시설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,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, '노란봉투법' 개정 재검토,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등 강조

□ 국세청장-중견기업 현장소통 간담회 (5.24)

- 중견기업의 세무 애로를 공유하고, 국세 행정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'국세청장-중견기업 현장소통 간담회' 개최
-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 개선, R&D·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,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12개 과제로 구성된 '중견기업 정책과제' 전달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동향

□ [금융위원회] 기업 M&A 지원방안 (5.8)

- 국내 M&A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·개선하기 위해 ▲M&A 규제 개선, ▲M&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, ▲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&A 지원, ▲M&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추진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.0 (5.9)

- '청정수소 중심 수소산업 육성'을 목표로 ▲선제적 안전기준 개발, ▲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, ▲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, 10대 추진과제, 64개 세부과제 발표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(5.18)

- '27년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50% 달성, 경쟁국과 기술격차 5년 이상 확대, 소재·부품·장비 자립화율 80% 확보, 전문인력 9,000명 양성을 목표로, ① 민간투자 전폭 지원, ② 3대 신시장 창출, ③ 초격차 기술 확보, ④ 단단한 공급망 구축, ⑤ 산업인력 육성 등 핵심 전략 추진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 (5.23)

- ▲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지원(14.3조 원) 및 일감 확보('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), ▲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, 미래차 부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미래차 체질 강화, ▲ 2대 주력시장(미국, EU)과 3대 유망시장(중동, 중국·일본, 아세안·인도)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 추진

□ [기획재정부]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(5.24)

- 올해 유럽연합(EU)이 마련할 예정인 공급망 내 인권·환경 실사 의무화 지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,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▲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업종별 컨설팅, ▲ 실사대응 플랫폼 구축, ▲ 인력·자금 여건 개선 지원, ▲ 원청·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(5.26)

- 550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① 제조역량 확보, ② 기술·인재 강국 도약, ③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, ④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 등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, 규제혁파,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계획 수립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입법동향

1 정부

□ [법제처]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(5.2)

-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, 서비스와 내용·방식이 유사한 경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처리절차(패스트트랙)를 마련하고, 면책 및 포상 규정 신설

□ [기획재정부]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(5.10)

- 국가전략기술·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이동수단 분야 및 수소 분야 기술·시설 추가

□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(5.12)

- 공공부문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위해 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(SaaS) 직접구매 제도 도입, ② 직접구매비율 60% 이상으로 확대 등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강화

□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(5.18)

- 국가전략기술 선정·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, 전담기관 지정 등 절차·방법을 구체화하고, 정부 지원 요건·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

□ [공정거래위원회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(5.23)

-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의 내부거래시 ▲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기준금액 50억 원 이상 →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, ▲5억 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

□ [공정거래위원회]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(5.25)

- ▲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, ▲국내 기업 해외사업장의 인근 국가 이전(P턴) 지원 등 공급망 안정품목 지원사업 근거 신설, ▲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(EWS) 및 공급망센터 운영근거 신설, ▲희소금속 경쟁력 강화시책 마련 및 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 신설

□ [공정거래위원회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(5.25)

- ▲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법적 근거 마련, ▲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, ▲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, ▲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·준정부기관·기타공공기관 포함 등

2 국회

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, 5.2)

-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·침해 행위 입증요건 완화 및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 행위의 범위 확대

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의원, 5.2)

-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하고, 금융채권자협회의 의결시 기존 금융채권자협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

□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, 5.3)

- 광범위하게 정의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, '원천기술 소프트웨어', '패키지 소프트웨어', '국산 상용소프트웨어'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, 국가기관 등의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우선 구매 노력 등 활성화 방안 마련

□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욱의원, 5.4)

- 본사나 공장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적용 법인세율을 100분의 50까지 인하

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 의원, 5.8)

-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대규모유통업 관련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 강화

□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, 5.8)

- 국내 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핵심 사안 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

□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(구자근의원, 5.9)

- 수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지방기업·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·소득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□ **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, 5.9)**

-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'기회발전특구'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, 기업상속 공제금액을 현 300억~600억 원 → 500억~800억 원으로 상향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호의원, 5.9)**

-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견기업 100분의 7 → 100분의 20, 중소기업 100분의 10 → 100분의 25, 대기업 100분의 3 → 100분의 15로 상향

□ **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지성호의원, 5.11)**

- 사용자가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 확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

□ **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지성호의원, 5.11)**

-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, 자동차 제작업체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

□ **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, 5.11)**

-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, 2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, 5.12)**

- 바이오산업 연구개발비·시설투자비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, 5.15)**

- 토지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관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
□ **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동주의원, 5.15)**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시설 설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·조사를 지원하도록 함

□ **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수의원, 5.16)**

- 산업재해 발생 개요·원인 및 보고 시기, 재발 방지 계획 보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독립된 전문가의 관련 의견도 보고하도록 함

□ **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(한무경의원, 5.16)**

- 기업의 수출 진흥 및 부담 경감을 위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무역기술장벽(차별적 기술규제)에 대해 지원정책, 관련 사업, 질의처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,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

□ **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하태경의원, 5.18)**

- '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' 폐지 및 외부 감사 대상 회사가 연속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도록 규정

□ **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철승의원, 5.19)**

- 수·위탁거래에서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 개선 요구, 시정명령,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

지원사업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(5.8)

- 공장 신·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이 공장 건설기간 동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 모집해 교육하고,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라이징 리더스300 (5.12)

-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은행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, 선정기업에 ▲최대 300억 원 대출, ▲1.0%p 금리 우대, ▲회사채 발행 지원, ▲글로벌 데스크 운영 등을 지원하며, 중견련 등 각 전문기관별로 ▲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연계, ▲에너지 혁신 스타트업 매칭, ▲중견기업 전용 연구인력 사업 연계, ▲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기술평가 지원사업 (5.22)

- 중견·중소기업에 ▲벤처캐피탈(VC) 등 투자기관의 투자 유치에 필요한 '투자유치용 기술평가 비용', ▲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·발급 용도의 '보증신청용 기술평가 비용' 지원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제2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(5.22)

-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중견·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위해 감축설비 도입 총사업비의 50%(중소 70%) 이내에서 업체별 최소 1,000만 원 이상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2023년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(5.24)

- 순환경제 분야의 신사업 추진 또는 해외 진출 희망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순환경제 신사업 모델 개발·실증화 지원, 해외 전시회 개최, 현지 생산 기지 구축 등 지원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중견기업-공공기관 공동기획 (5.24)

- 고난도 혁신기술 개발,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 또는 중견후보기업을 해당 분야 공공연구기관과 매칭해 공동 기획 및 협력 네트워크 활동 지원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중견기업-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(5.25)

- 지역 중견기업 전문인력 확보 및 공동 연구개발(R&D) 지원을 위해 올해 선정된 첨단산업분야 컨소시엄에 5년간 69억 원씩 지원, ▲지자체·대학·혁신기관과 중견기업이 협력하는 '지역 혁신 얼라이언스' 구성 및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지원, ▲중견기업의 수요기술을 보유한 대학 내 연구실을 '중견기업 혁신연구실'로 지정해 공동 R&D 수행 등